

한국의 빈곤층대상 주거복지 현황과 개선방향

Status and Improvement of Housing
Welfare System for Poor People in Korea



빈곤사회연대

Korean People's Solidarity against Poverty

1. 한국의 주요 주거복지제도



- 임대주택
- 주거급여
- 주거지원
 - 긴급주거지원
 -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



2. 임대주택 현황

- 정부의 정책소개:

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 계층에 따라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

-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



2. 임대주택 현황

- 빈곤층이 가장 선호하는 영구임대주택은 지난 10년간 재고 증가분이 약 6만호에 불과하며, 입주 후 50년간 거주를 보장받기 때문에 신규입주가 매우 어려움
- 공공임대주택 유형 중 영구임대주택을 제외하면 임대료 수준이 빈곤층이 부담하기 어려움



3. 주거급여 현황

- 정부의 정책소개:

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, 소득·주거형태·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

- 정부는 2015년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을 통해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으며,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다고 홍보하지만 현실은 다름



3. 주거급여 현황

- 개편된 주거급여의 선정 소득기준은 중위 소득의 43%로, 이는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인 최저생계비의 약 108.8%에 불과한 미미한 완화
- 또한 부양의무자기준의 존치로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 때문에 수급 탈락



3. 주거급여 현황

-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현황을 보면 주거급여 수급자들이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임차료는 15만원이지만, 지급받은 주거급여액은 평균 10.8만원
- 주거급여 지급액의 상한선인 기준임대료가 최저주거기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, 그 조차도 현실적인 부동산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



4-1. 긴급주거지원 현황

- 정부의 정책소개:
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이에게 거주할 장소나 거주할 비용을 지원
- 위기사유에 대한 보수적인 판단으로 인해 지원신청 자체가 반려되는 경우가 많음
 - Ex: 2년 전 실직 후 1년 6개월째 노숙중인 내담자가 지원신청을 하자 "위기사유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긴급지원 대상이 아닙니다."라는 답변을 들음

4-2.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현황

- 정부의 정책소개:

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(매입임대, 전세임대)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

- 주거취약계층이 전국적으로 26만 여명으로 추산되는데 비해 4천 여호 가량 공급된 상태로 절대적인 공급부족

4-2.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현황

- 특히 매임임대주택의 경우 자활계획서 작성, 운영기관의 입주심사 등 타 임대주택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고 진입장벽이 높은 한계를 가짐
- 거동이 불편한 노인, 장애인의 경우 적합한 주택을 보장받기 어려움



5. 주거복지 정책 개선방향

- 적절한 주거의 조건은 부담 가능성과 살만한 집. 그러나 현실은 부담 할 수 있으면 살만하지 않거나, 살만하면 부담할 수 없음. 이는 부동산 정책이 주거보장이 아닌 재산권 보장을 우선시켰기 때문.
-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한편, 주거복지 정책의 물량을 늘려야 함



5. 주거복지 정책 개선방향

-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대 및 임대료 현실화
- 주거급여 대상 확대 및 보장수준 현실화
- 즉각적인 주거지원을 위한 절차 간소화
- 무장애주택 공급 및 주택개조 지원